

북·일 수교회담의 현황과 전망

강 성 윤
(동국대 교수)

目 次

- I. 머리말
- II. 수교회담의 진행과 중단
- III. 북한의 전략수정과 대화환경의 변화
- IV. 수교회담의 재개와 국교정상화
- V. 맺는말

I. 머리말

북한과 일본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교회담은 1991년 1월부터 진행되었다. 수교회담이란 형식으로 양국 정부당국간에 시작된 회담은 북한정권수립 43년만에 비롯된 최초의 공식적인 대화였다. 이처럼 어렵게 시작된 양국간의 대화는 진행에서도 어려움과 진통이 노정되어 대화개시 1년 10개월만에 중단되어¹⁾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교회담이 중단된 지난 3년반 동안의 양국의 관계와 변화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상태라 하겠다.

예컨대, 당시 수교회담이 중단된 본질적인 이유였던 북한의 핵개발의혹에 대한 문제도 북·간의 합의로 타결되었다. 당시 북한의 핵문제를 수교회담의 의제화하여 투명성을 밝히려는 일본에 대하여 북한은 일·북회담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문제이며, 미국과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1) 1992년 11월 5일부터 진행된 제8차회담 오전 실무회의에서 일본이 제3차회의에서 재개했던 <이온해> 문제를 재차 제기함에 따라 북한측이 이를 빌미로하여 회의진행을 거부함으로써 중단된 이래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양국간 수교회담의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핵문제가 북한의 의도대로 미·북간의 협상을 통하여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일본도 95년 3월 9일에 KEDO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한편 일본의 연립여당대표단은 95년 3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조선로동당과 수교회담재개를 위한 합의서에 조인²⁾함으로써 회담재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로부터 일·북양국간에는 실무접촉을 통하여 회담재개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

이와같이 회담중단이후 전개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양국간의 수교회담의 재개는 그 시기를 언제로 결정하느냐는 문제만 남아 있는 상태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정상화문제가 양국간의 쌍무적인 현안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국적인 성격을 지닌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어지고 있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는 일·북 수교회담재개를 촉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4월 16일 한·미정상간의 <제주도선언>에서 나타난 한반도 평화문제와 미·북간의 대화를 분리치리키로 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한반도 제대화채널의 대화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은 일·북회담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중단이후 변화된 대화환경과 관련하여 향후 수교회담을 전망한다는 맥락에서 회담의 진행과 중단된 전망, 북한의 전략수정과 대화환경의 변화, 그리고 대화재개에 대한 양국의 입장 등을 중심으로 검토코저 한다.

II. 수교회담의 진행과 중단

1. 정단간대화에서 정부간대화

일본과 북한간에 수교회담은 1988년 7월 7일에 일본이 북한에 대하여 정식으로 정부

2) 일본의 연립여당(자민, 사회, 사기가케)은 외다나베 미치오(渡邊美智雄)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1995년 3월 28일 - 30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조선로동당과 '양국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대화와 교섭에 어떤 전제조건도 달지 않으며,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입장에서 교섭한다'는 회담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3) 95년 9월 27일 북한 외교부대변인은 일본과 회담재개를 위한 접촉과 관련하여 '쌍방사이에 회담재개를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접촉사실을 확인하였다.

간대화를 제의하는 정책적 전환을 표방함으로써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2년 4개월만인 90년 11월 3일 수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란 이름으로 양국정부 당국자들간에 최초의 공식적인 회담이 북경에서 진행되었고 3차의 예비회담을 통하여 본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같이 양국간에 수교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북경에서의 예비회담전인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파리, 동경, 교토 등에서의 비밀접촉을 통하여 양국의 입장이 조율되었고 접촉이 시작된 4월부터 북한의 로동신문은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을 중지하였다.⁴⁾ 그후 북한은 7월 17일에 평양을 방문한 일본 사회당대표단과 양국 정부간대화 스케줄에 합의하고⁵⁾ 그 합의에 기초하여 북한은 9월 24일에 자민당의 <가네마루>, 사회당의 <다나베>를 각각 단장으로 하여 89명으로 구성된 대형 방문단을 받아들였다. 당시 북한은 동방문단과 <조·일관계에 관한 조선로동당, 일본자민당, 사회당의 공동선언>을 합의 발표하고 7년간 억류하고 있던 제18후지산마루호의 2인의 선원을 석방함과 아울러 전격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수교회담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당시 3당공동명의로 발표된 공동선언은 그 성격(구속력)과 관련하여 일본과 북한간의 수교회담 쟁점이 되고 있으며,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국내에서만 아니라 한국으로부터도 강한 비판과 항의를 받아 결국 <가네마루>가 10월 8일 서울을 방문하여 경위를 설명하기에 이르렀고 동 선언과 관련하여 한국의 노태우대통령이 일본에 제시한 <5원칙>은 그후 일·북교섭에 대한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었다.⁶⁾

여하튼 3당공동선언은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2인의 선원을 석방시킴으로 하여 7년간 계속해 온 북한의 인질외교에 종지부를 찍게한 점과 기존의 사회당 일변도에서 자민당까지 대화채널을 확대 그리고 정당외교를 정부간외교로 전환시키어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교회담을 진행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일·북관계는 정당과 정당간의 관계에서 국가와 국가간의 공식적인 접촉과 대화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수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일본과 북한간에는 예비회담의 진행과정에서 <3당공동선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롯하여 양국간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⁷⁾

4) AERA, 1990년 12월 11일자, pp.24-26

5) 합의내용요지는 '9월에 조선로동당이 가네마루를 포함한 자민당, 사회당의 방문단을 받아들이며 우선 자민당, 사회당, 로동당 삼당간에 교섭을 하고 그후 정부간교섭을 한다는 정부간대화 스케줄에 합의. 月刊 ASAHI, Vol. 12, 1990, p.77

6) 小此木政夫, 일조국교 교섭과 일본의 역할, 포스트냉전의 조선반도, 일본국제문제연구소, 1994, p.261

7) 강성윤, 북한의 대일정책과 수교전망, 안보연구 제25호, 동국대 안보연구소, 1995, pp. 73-74

첫째, 이른바 배상에 관한 문제로서 북한은 전전 전중을 포함하여 전후 45년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은 간도 문제이지만 청구권이라는 표현으로 문제에 접근하였다. 따라서 예비회담의 합의를 유보하고 본 회담에서 제2의제인 경제적 재 문제의 하나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둘째, 북한의 핵문제로서 일본이 북한에 대하여 IAEA의 핵사찰을 받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이 북한의 핵문제를 수교회담의 의제화를 제기한 것은 미국의 요구가 작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핵은 일본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북한은 일본의 핵사찰 제기에 대하여 양국간의 수교회담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핵문제도 합의를 유보하고 제3의제인 국제문제에 포함시키어 본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미루었다.

결국 세차례에 걸친 예비회담에서 양국은 (1)조·일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문제 (2)조·일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 (3)조·일국교정상화에 관련된 국제문제 (4)기타 쌍방이 관심을 갖는 문제 등 4개항에 합의하고 <조·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 토의 기록>에 서명함으로써 본 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2. 선·수교후·협상과 핵의혹

예비회담과정에서 노정되었듯이 수교회담에 대한 양국간의 입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회담의제에서 부터 상호대립되는 문제점을 갖고 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수교회담을 조기에 타결하려고 진행을 서둘렀고 일본은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매우 신중하게 회담에 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수교회담에 합의하기 이전에 정부간 대화를 모색하던 시기에 보여주었던 양국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라 하겠다.

일본은 4개항의 교섭기본방침⁸⁾을 확정하고 임했기 때문에 회담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북한도 단기간의 회담을 통하여 국교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회담전략을 수정하여 91년 5월 30일에 개최된 제3차회담에서 선·수교, 후·협상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북한의 제의를 거부하면서 3개항의 교섭진전을 위한 전제조건⁹⁾을 제시하면서 이

8)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 본회담을 진행함에 있어 1) 교섭은 조선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2) 일조국교정상화가 일한우호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3) 식민지 통치 36년간에 대하여서는 청구권문제로 성실히 대응하지만 전후 45년간의 보상에는 응하지 않는다. 4) 북한이 국제원자력 기관에 의한 핵사찰을 받는 것은 일본의 안정보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4개항의 교섭기본 방침을 확정. 朝日新聞, 1991년 1월 26일자.

9) 3개항의 전제조건은 첫째, IAEA에 의한 핵시설의 사찰, 둘째 남북한총리회담의 조기재개, 셋째 남북

른바 <이은혜>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의제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일본이 이은혜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수교교섭의제에도 없는 것이며 회담 절차를 깨는 파괴행위로서 북한을 국제적으로 신용할 수 없는 국가라고 선전하는 주장과 함께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이 제시한 3개항의 전제조건을 거부하던 북한은 1991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기존 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모두 충족시키었다. 즉, 국연가입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어 91년 9월에 한국과 동시가입을 하였고 12월에는 남·북한간에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를 채택한데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의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92년 1월 30일에 IAEA핵안정협정에도 서명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일본의 요구를 충족시키었다는 입장에서 선·수교 후·협상을 제차 요구 하였으나, 일본은 핵개발의혹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진전도 있을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였다.

이처럼 핵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수교협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8차 회담이 진행되었고, 동 회의에서 일본이 이은혜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빌미로 북한이 회의진행을 거부함으로써 중단되었다. 당시 회담이 중단된 다음날 인 11월 6일 북한의 천복용 부단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른바 이은혜문제를 본 회담에 결부시켜 회담이 파괴되는 것은 모든 책임이 일본에 있다.'¹⁰⁾고 이은혜 문제가 결렬 주 원인인 듯이 입장을 밝힌 이래 3년반동안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중단의 주원인은 북한의 핵문제였으며, 제8차회담이후 핵문제에 의한 미·북간의 긴박한 상황은 일·북회담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Ⅲ. 북한의 전략수정과 대화환경의 변화

1) 대화전략의 수정

북한은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과의 수교회담 제의과정에서 보듯이 일본을 일순위로 설정하고 이른바 유격대식으로 국교정상화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일성은 <가네마루>와 <다나베>를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과 사회당의 대표단의

한 동시국연가입

10) 産經新聞, 1992년 11월 6일자

평양방문단을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수교회담을 제의하고 속전속결로 국교를 맺는다는 방침을 갖고 회담에 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일본정부와 공식적인 수교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궤도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¹¹⁾

첫째, 일본의 대북접근전략에 대한 북한의 판단착오 내지 이해부족 북한이 일본을 제1의 관계개선 대상으로 설정한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본의 적극적인 대북접근자세와 수교를 통한 경제협력이란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은 국교정상화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수교회담을 진행하였으며 더욱이 한·미양국의 대북관계 진전에 앞서 속전속결로 처리할 이유가 없었다. 물론 정당 외교에 한정되었던 시기에는 정부간의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필요하였고 또한 선원을 억류하는 인질외교의 종식을 위하여서도 적극적인 대북접근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가 수교회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완전히 해소된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한·미·일 삼국간의 대북협조체제에 대한 과소평가

북한은 일본이 88년 정부간 대화를 제의한 후 자신들과의 대화에 상당한 의욕을 나타냈고 한·미·일 삼국간에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쌍무적인 관계로 한정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한국이 소련 및 중국관계 개선방식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중·소와는 입장이 다르며 한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관계유지라는 계산아래 수교협상을 전개하였다.

예컨대, 일본이 91년 본회담에 앞서 발표한 4개항의 기본교섭방침을 비롯하여 5월 30일 제3차회담에서 3개항의 회담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은 한·미와의 긴밀한 대북협조체제를 나타낸 대표적인 예라하겠다.

셋째, 선·핵의혹에 대한 해결의 필요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협상에서 자신들의 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한다는 전략이었으나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핵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양국간의 수교회담을 중단시킨 실질적인 요인인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문제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사용할 카드가 아니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보다 많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11) 강성윤, 앞의 논문, PP. 76-77.

과의 수교회담용으로 쉽게 사용해 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요인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핵문제의 타결없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교섭은 한계가 있음을 실감케 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제8차회담에 이르러 이은 핵문제를 빌미로하여 일본과의 교섭을 중단하고 이른바 NPT탈퇴라는 핵카드를 만들어 미국과 협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2) 대화환경의 모색과 변화

북한의 NPT탈퇴로 조성된 긴박한 상황은 94년 7월 <카터>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핵문제가 진전되는 국면에 접어들어 10월에 미·북간의 제네바기본합의에 이어 95년 3월 한·미·일일 주축이 된 KEDO의 설립과 6월에 쿠알라룸프르회담을 통하여 미·북간의 합의로 핵문제가 타결되었다.

따라서 일·북수교회담의 최대의 장애물인 핵문제가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완전한 해결은 아닐지라도 핵문제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국제적환경이 조성되었다.

한편 일본과 북한간에도 대화재개를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95년 3월 3일에 평양을 방문한 일본 연립여당대표단과 북한의 조선로동당의 '어떤 전제조건도 없는 수교회담재개'를 위한 합의서에 조인한바 있으며 95년 7월 8일 김일성사망 1주기를 맞이하여 당시 무라야마총리는 북한에 회담재개를 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홍수와 관련하여 2차에 걸쳐 50만톤의 쌀을 지원한바 있다. 인도적 관점에서나 대북국교수립이란 외교전략상 홍수복구지원은 양국관계를 진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수교회담재개에 필요한 일·북한의 관계는 95년 9월 27일 북한외교부대변인 '쌍방사이에 회담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것이 시사하듯이 재개시기를 언제로 결정하는가만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북수교회담이 재개되지 못했던 것은 한국과 합의한 대북정책¹²⁾등과 같은 한국과의 관계가 고려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즉, 주변우방국들의 북한과의 모든 대화는 남북대화진전과 속도를 같이하여야 한다는 한국의 정책이 일·북수교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96년 접어들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대미 평화협정공세와 <붕괴불가피론><전쟁불

12) 대표적인 사례로 '95년 11월 김영삼대통령과 무라야마 도이치총리간에 오사카정상회담에서 '수교전 경협불가, 남북관계와 북일관계 조화·병행, 추가 대북지원 불가능'등 대북수교 3원칙 등을 꼽을 수 있다.

가피론)등이 제기되면서 전개된 한반도의 상황의 급격한 변화는 지난 4월 16일 한·미정 상회담에서 4자회담제의를 주요내용으로한 <제주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제주선언에 나타난 한반도 평화문제와 북·미간 대화를 분리처리키로한 것은 기존의 북·미대화 만이 아니라 북·일대화, KEDO·북, 나아가 남북대화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관계없이 북한과의 수교회담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며 지난 4월 22일의 일본 연립여당 대표단의 방한은 대 북수교 교섭원칙의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IV. 수교회담의 재개와 국교정상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교회담이 중단된 이후 북한과 일본간에 전개된 일련의 상황 과 주변정세를 종합해 보면 양국간의 수교회담의 재개는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속단할 수만도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북간의 수교문제는 양국간의 현안타결인 동시에 한·미와 관련된 다자간의 문제란 성 격을 지니고 있고 그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물론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회담논리에 변화의 조짐이 있으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한·일관계가 우선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점을 북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도 로동신문을 통하여 수교회담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협의하는 것에 대하여 '남한과 상의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일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조일관계는 영원히 개선될 수 없을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의 새정부가 <독자적 인 외교> <자립외교>를 표방하고 있는데 유의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¹³⁾도 한국과 미국의 영향력 배제를 겨냥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미국과의 핵타결의 내용이 일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이 KEDO에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을 일본안보의 위협요인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미·북합의내용에 과거 핵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미미한 상황이므로 미사일개발 문제와 더불어 다시 수교회담의 쟁점화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김정일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란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교착상 태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이 자신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된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고 그 경우 또다시 재개시킨다는 것은 보다 어렵고 불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교섭제

13) '일본의 대조선정책을 논함', 로동신문, 1996년 2월 26일자.

개를 선택치 못하고 있는 요인이라 하겠다.

또한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협상에서 미국과의 핵협상과 같이 유격대식 협상전략을 전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의 입장은 늦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미국이 핵타결을 하여야 했던것과 같이 절박성도 없으며 서둘러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정상적인 협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북한과 일본은 국교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선득 협상태이블에 나서지 못하고 시기를 기다리면서 환경을 성숙시키어 각기 회담에 유리한 고지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간에 수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준비를 상당기간하였다는 점과 양국간의 국교정상화는 양국 모두에게 최고의 정치상품이란 점에서 전격적으로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수교회담의 재개와 국교정상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교정상화는 현안 타결의 복잡성과 장기성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한은 선·수교, 후·협상방식을 재의하고 있으나 일본은 반대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절충적인 방법으로 미·북관계의 패턴과 같이 대표부 설치과정을 거쳐 수교관계를 맺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V. 맺는말

종합해 볼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북한간의 수교교섭의 재개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수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여 곧 수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 제기된 본 회담의제(특히 1과 2)과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음을 고려할 때 수교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교회담의 종착역인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정상화는 한반도의 남·북한 교차승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통일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한국에 있어서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과도 전개되어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북한과의 수교회담 당사자인 일본이 회담을 전개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몇가

지점14)을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한국과의 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보다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일수교는 양국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네마루>의 평양방문과 같은 외교행태로 인하여 양국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키어서는 안될 것이며 만약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하여 한일관계가 손상된다면 그것은 일본외교의 돌이킬 수 없는 과실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통일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업이 있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일·북 회담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교 청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남북의 평화적통일을 지원하는 일·북회담'이 되어, 그들이 갖고 있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 = 분단고정화라는 등식을 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한국도 일본의 대북관계개선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갖고 양국간의 공조체제와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본 쌀보다 한국의 쌀이 평양에 먼저 보내져야 한다는 논리는 한·일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바 있듯이 감성적인 정책대응이 아니라 시대상황에 걸맞는 보다 이성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전개를 하여야 될 것이다.

14) 강성윤, 일본의 대북한정책전개에 관한 연구, 행정논집 제23호, 1995, pp.197-198